

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

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

2019. 5. 30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III. 추진 방향	4
IV.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	5
1. 발생원별 저감 대책	5
2. 해양 플라스틱 수거·운반 체계 개선	7
3. 해양 플라스틱 처리·재활용 촉진	8
4.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	10
V. 향후 추진 계획	12

I . 추진 배경

- 全세계 해양쓰레기의 80%는 플라스틱(17, UN 오션컨퍼런스)으로 추정, 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지나야 소멸되어 장기간 해양 오염 유발
 -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, 미세플라스틱^{*}은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 - * Microplastics: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된 1μm ~ 5mm미만의 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지칭
-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응 촉구
 - UN환경총회(UNEA)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각 국가의 관심을 독려하며,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등 적극적 대응 요구
 - 또한, G20정상회의(17.7월) 및 동아시아정상회의(18.11월)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·성명서 채택
 - 금년 G20(6월), APEC[†](11월) 정상회의에도 해양 플라스틱이 의제로 논의될 예정
 - *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작성 중인 「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」 채택 논의
- 국내에서도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의 우려 지속 증가
 - 최근 폐사한 바다거북 등에서 플라스틱이 발견^{*}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사고 등을 유발^{**}
 - * 국내 폐사 바다거북(38마리) 중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('17.6~'19.5)
 - **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획량의 약 10%(3,787억원)가 감소하고,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11%(887건, '13~'17)
 - 또한,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^{*}되고 있어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민의 불안요소로 작용
 - * 해수표층(2.46개/m³), 패류(0.36~1.02개/g), 어류(1.04~2.40개/마리)

II. 현황 및 문제점

< 발생 >	< 수거·운반 >	< 처리·재활용 >
▶ 해양 발생/육상 유입 ▶ 해외 유입	⇒ ▶ 국가: 항만·국가어항·EEZ ▶ 지자체: 영해·해안가	⇒ ▶ 폐기물처리업체 위탁 ▶ 소각·매립(재활용률 10%↓)

1 발 생

□ (현황)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6.7만톤으로 추정('18)

- * 「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('18)」
- 해양의 폐어구·폐부표와 육상(하천 등)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주요 원인
 - * 해양(외국포함)기인: 4만톤(60%), 이 중 3.6만톤이 폐어구·폐부표
 - 육상기인: 2.7만톤(40%), 이 중 2.1만톤이 하천을 통해 유입
- 또한, 중국 등 주변국 쓰레기가 국내로 이동되는 사례도 확인
 - * '18년 기준, 해안가 쓰레기 중 외국기인은 약 2% 차지(96%가 중국에서 유입)

□ (문제점) 발생원(해양, 육상, 외국)별 예방체계가 미흡

- (해양발생) 폐어구·폐부표 회수체계 미비*로 해양 방치·유실이 지속
 - *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위한 시설(집하장)과 유인책이 부족
- (육상유입) 하천(홍수기) 등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차단이 미흡하고,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 생산·소비량 감축이 필요
- (해외유입)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

2 수거 · 운반

□ (현황)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연간 6.1만톤 수거('18)

- * '18년 현재 현존량[Σ (발생량-수거량)]은 11.8만톤으로 추정
- (국가) 항만(22척), 국가어항(12척), EEZ 대상으로 선박을 활용해 수거('18, 442억원)
(해양환경공단, 어촌어항공단 등 위탁)
- (지자체) 해안쓰레기(국가 지원)를 주로 인력을 이용해 수거('18, 320억원)

- (문제점) 사각지대 존재, 비효율적 수거체계, 열악한 지자체 여건 등으로 수거량이 발생량보다 적어 플라스틱이 해양에 계속 축적
- (사각지대) 접근이 용이한 육지 해안가 등은 상대적으로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, 접근성이 낮은 도서·해저 등은 한계
- (수거체계) 전통적인 수거 방식*, 분포현황 정보 부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, 공공주도의 수거로 민간 참여는 저조
 - * 육안으로 발생 현장을 확인한 후 수거
- (지자체 여건) 예산·장비 등 부족으로 관할구역의 수거 공백^{*}이 발생

3 처리·재활용

- (현황)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육상 폐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「폐기물 관리법」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
- (문제점)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, 재활용 실적이 부진
- (처리) 염분·이물질로 인한 시설물 고장 등의 우려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적시 처리 지연 사례 발생
- (재활용) 해양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 재활용의무율(양식용 부표 29%)이 육상 제품(PET병 80% 등)에 비해 낮고, 재활용 제품 수요도 부족

4 관리 기반

- (현황) 해양환경관리법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관리 중이며,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생물 위해성 연구를 진행 중('15~'20)
- (문제점) 발생예방부터 효과적 수거·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,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 미흡

III. 추진 방향

비 전

해양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

목 표

'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50% 저감

('18년 11.8만톤) ('22년 30% 저감)

전 략

- ◆ 발생·수거·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
- ◆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 정비와 국민 참여 확대

추진과제

① 발생원별 저감 대책

- ①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
- ②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
- ③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대응

② 해양 플라스틱 수거·운반체계 개선

- ① 수거 사각지대 해소
- ②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
- ③ 수거체계 효율화

③ 해양 플라스틱 처리·재활용 촉진

- ①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
- ②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

④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

- ① 법적 기반 마련
- ②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반 구축
- ③ 국민 참여 확대
- ④ 맞춤형 교육 강화

IV.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

1 발생원별 저감 대책

- ◆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54%인 폐어구·폐부표와 31%인 하천 유입 쓰레기 집중 관리로 발생량을 6.7만톤('18)에서 5.6만톤('22)으로 저감
-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어구·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, 하천관리청에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차단 의무도 부여

①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

- (폐어구·폐부표 회수촉진)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 유도를 위해 공병 보증금과 유사한 「어구·부표 보증금」 제도 도입* 추진('21~)
 - * 폐어구·폐부표를 정해진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불 ('19, 타당성 용역 → '20,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→ '21, 시행)
 - 어업인이 가져온 폐어구·폐부표를 적치하기 위한 집하장을 주요 항포구('19, 14개)에 설치하고, 쓰레기는 국가·지자체가 전담 처리
- (어구관리 강화) 어구 과다사용으로 인한 폐어구 발생 증가 방지를 위해 산란·성육기(매년 5월, 10월)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* 실시
 - *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50척, 육상단속 전담인력 103명
 -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에 대해 사용·제조(현행) 뿐만 아니라 수입·유통도 전면 금지(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추진, '19)
- (친환경부표 보급)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* 확대(보급률: '18년 23.6% → '22년 50%)
 - * 기존 스티로폼부표를 친환경부표로 전환 시 정부·지자체가 비용 지원 (보조율, 국비/지방비/자부담=35%/35%/30%, '19년 국비 35억원)
 - ** 보급 목표 달성('22) 후 스티로폼 부표의 생산·사용 금지 또는 부담금 부과 검토

② 육상 쓰레기 유입 차단

- (하천유입 저감)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 의무* 부과 추진
 - *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[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(국회 계류 중)]
 - 장마·태풍 전에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, 홍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입 차단막 성능 개선(R&D, '21~) 추진 및 추가(6개) 설치* 검토
 - * ('18년 기준 운영현황) 한강 1개, 영산강 2개, 섬진강 1개
- (생산단계 관리) 생활화학제품* 내 미세플라스틱 현황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('19, 환경부)으로 해양유입 예방
 - * 현재는 화장품, 의약외품에서만 미세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금지('17~)
 - **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EU차원의 사용제한 규제 필요(유럽화학물질청 발표, '19.1월)
- (유통·소비 단계 관리) 해양에 유입되기 쉬운 포장재*, 1회용품**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통·소비 구조 확립(환경부)
 - * 과대포장 제한 기준 마련 등 / ** 비닐봉투, 1회용컵 등 사용 저감

③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대응

- (공동 조사·연구) 지역기구(NOWPAP 등) 및 양자 협의체를 통해 주변국과 공동 조사·연구를 실시하여 대응기반 마련
 - * 조사 완료 후 원인국에게 유입방지 협조를 요청하고, 우리나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
- (합동 대응팀 구성) 해양 플라스틱 문제 관련 국제동향* 파악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** 합동 대응팀 구성('19.上)
 - * 유엔환경총회(UNEA)는 '14년부터 세 차례 해양쓰레기 대응 결의안을 의결
 - ** 해수부, 해양환경공단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

2 해양 플라스틱 수거·운반 체계 개선

- ◆ 해양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예산·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거를 대폭 강화하여 수거량을 6.1만톤('18)에서 7.9만톤('22)으로 확대
 - 도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폐어구 포함 침적쓰레기도 집중 수거,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보조율 상향과 선박·장비 확보 지원

① 수거 사각지대 해소

- (도서 등) 해양재유입 가능성이 높은 도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, 정화운반선·차량을 권역별로 보급('20~)
 - * 선박 1척이 담당하는 도서그룹(20개 이상)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
 - 아울러, 군사보호구역·해양레저 활동지역 등은 군·해경 또는 민간 잠수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거(관련기관 MOU 체결, '19)
- (해저) EEZ^{*}는 우선 어업단체 협력^{**}을 통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를 추진하고, 대형방제선(5천톤급, '18~'22 건조)도 활용
 - * 수심이 깊어 현재 침적 쓰레기를 수거 중인 선박으로 수거가 어려운 상황
 - ** 해양환경공단과 4개 수협(대형기선저인망조합 등)간 MOU 체결 및 시범사업 실시('18.7~11월, 57톤) ☞ 수협이 수거하면 해양환경공단에서 처리 지원
- (항만·어항 등) 예산('19, 175억원) 확대로 침적쓰레기 집중('20~'22) 수거 추진

②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

- (어업인 자율 참여 유도) 자율관리공동체,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수거실적에 따라 어촌계에 인센티브 부여
 - 어한기 등 일정기간에 조업을 중단하고 폐어구 집중 수거^{*}('19 시범, 거제시)
 - * 어업인·지자체 협조를 통해 일정기간(1개월 ↓) 동안 시·군 단위 해역별로 적용
- (바다환경 지킴이) 지역민을 채용하여 해안가·어항·낚시터 등의 일정 구역을 상시 전담 관리(수거 및 투기 감시 등)하는 사업의 대폭 확대 추진
 - * '19, 100개 구역에서 200여명 활동

- (지자체 수거 역량 강화) 지자체에 지방비 확충을 독려하고, 국고 보조율 상향(現, 30 또는 50%)과 정화 선박·장비 확보 지원을 추진

③ 수거체계 효율화

- (모니터링 스마트화) 항로, 어장 구역, 해류 특성 등을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 작성('20~, R&D)을 추진하고 수거작업에 활용
 - 기존 선박을 활용한 육안 모니터링 체계를 인공위성, 드론['18] 6개 항만, 6대→['19] 12개 항만, 15대] 등을 활용한 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
- (고효율 장비 도입) 기존 인력 중심의 수거를 보완할 수 있는 해변 미세플라스틱 제거 장비, 진공흡입식 수거 장치* 등 개발 추진('20~, R&D)
 - * 기존 장비(집게, 갈고리 등)로 제거가 어려운 테트라포드 등에 있는 쓰레기 수거

3 해양 플라스틱 처리·재활용 촉진

- ◆ 원활한 처리 환경 조성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방치 제로화
 - ◆ 독일,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

①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

- (인프라 확충) 해양 플라스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염분,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*을 구축
 - * 기존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장에서 처리가 어려운 폐어망·폐로프 등을 세척·절단·선별
-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부표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스티로폼 압축기* 보급 확대('18년 기준 27대 운영 중)
 - * 액자, 화분 등의 재료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폐스티로폼 부표를 압축
- (위탁처리업체 관리 강화)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를 지속 점검*
 - * “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”을 마련·보급('19.下)하고, 주기적으로 해수부-지자체 합동점검 추진

②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

- (생산자 책임 강화) 양식용 부표(現 29%) 등 기존 **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*** 적용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(환경부)
 - 재활용 여건,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 추가도 검토
 - * 제품 생산자(제조·수입업체)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
- (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) 지자체·공공기관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및 소비자 대상으로 우수제품 홍보 실시
 - * 환경부-지자체-공공기관 MOU 체결을 통해 재활용제품 공공구매·수요확대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('19.上~)
- 업사이클링(Up-Cycling)* 기회 공모전을 통해 민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, 우수작품 전시전을 개최하여 국민관심 유도
 - *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제품과 예술작품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것

<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대표 사례 >

Kook(대한민국)	Adidas(독일)	Cape Porpoise(미국)	Lush(영국)
			
폐그물을 재활용하여 그물가방(NET BAG)제작	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운동화 출시	가재잡이용 로프를 현관용 매트로 제작	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화장품 병을 제작

- (기술개발) 염분·땔 제거 특화 전처리, 폐어망 원사 추출 등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('20~, R&D)

<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사례(해외) >

- ▷ (미국) 3D프린터를 이용해 해안가 PET 병을 의료용 보철 제품으로 개발
- ▷ (노르웨이, (주)Nofir) 영국 등 14개 국가의 폐어망과 로프 등을 수거 후 분리·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원사 생산업체에 판매('11~'17, 33,742톤 수거)

- ◆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추진
- ◆ 해양 미세플라스틱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우려 최소화
- ◆ 전국 단위 캠페인·수거행사 및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 참여 대폭 확대

① 법적 기반 마련

- (해양폐기물 법률 제정) 발생예방, 효율적 수거 등을 뒷받침하는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정 추진(국회 계류 중)

————— < 해양폐기물법 주요 내용 > —————

- ▶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: 기본계획 수립, 실태 조사, 하천 관리청의 해양 유입 차단 의무 부과 등
- ▶ 수거명령제 도입: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수거를 명하고,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벌(1년/1천만원↓)을 부과
- ▶ 정화비용 구상권 행사: 정부, 지자체가 직접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인자가 특정된 쓰레기에 대하여 정화비용 청구

- (표준 조례안 보급)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을 위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·보급('20~)
 - * (사례) 제주도, 창원시, 포항시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조례를 운영 중

②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반 구축

- (분포도 조사)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, 지역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

- (위해성 평가)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 기준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위해성 평가* 추진('21, 일부처)

* 미세플라스틱은 바닷물, 수산물뿐만 아니라 생수, 수돗물 등에서도 존재하여 다양한 노출경로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연구 필요

** 현재는 해양생물 위해성 평가 연구만 진행 중('15~'20, 한국해양과학기술원)

③ 국민 참여 확대

- (국민 참여형 캠페인) 바다의 날(5.31)에 「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」을 개시하고, 정부·지자체·NGO·주민 협동의 대대적 수거^{*} 실시
 - * 정화주간(6.17~23) 운영, 전국의 해안·하천쓰레기 수거(해수부 · 환경부)
- 방송 노출, 대중교통·옥외 광고,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저감 실천요령 제공
 - ▷ (경각심 제고)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물 피해사례 등을 공유
 - ▷ (실천요령) 플라스틱 사용감축·재활용 활성화, 해변입양 등 시민운동 전개
- (지역 프로젝트 추진) 해변입양^{*}(Adopt-a-Beach) 운동과 같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일선 지자체에 보급('19~)
 - * 단체·기업 등이 특정 해변을 선택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정화활동 시행
- 행정기관과 지역 민간단체(라이온스클럽 등)가 연계(MOU 체결)하여 수거행사 공동 개최 등 자발적 수거 문화 조성
 - * 정부 주도의 연안정화의 날 행사(매월 셋째 주 금요일, '18.7월~)를 지자체, 지역 단체·주민, NGO까지 참여를 대폭 확대

④ 맞춤형 교육 강화

- (맞춤형 프로그램 개발) 대상별(어업인, 낚시인, 관광객 등)·연령별 특성^{*}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제작·보급('20~)
 - *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VR(가상현실) 교재 등을 개발하여 초등 학교 보급 및 어린이 참여 행사장에서 활용
- 어업인 교육과정,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, 해양과학교육관('20~) 등의 교육·홍보자료로 활용
- (현장중심 교육) 해양쓰레기 발생 특성을 고려한 주민교육^{*}을 실시하고, 해양환경 이동교실(현재 1대 운영 중)을 확대하여 현장방문 교육 강화
 - * (예시) 양식장 어장철거시 발생하는 폐부표 처리 방법 등을 집중 교육

V. 향후 추진 계획

추진 과제

세부 과제 및 일정

소관 부처

1. 발생원별 저감 대책

①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어구·부표 보증금 도입 용역('19) ·폐어구·폐부표 집하장 확충(연중) ·기준미달 어구 수입 금지('19, 법률개정) ·친환경부표 보급(~'22) 	해수부
② 육상 쓰레기 유입 차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마련('19) ·1회 용품 사용제한('19~) ·과대포장 제한 기준 마련('19~) ·하천 쓰레기 수거(연중) ·유입차단막 성능개선('21~, R&D) 및 보급 	환경부
③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외국기인 쓰레기 공동 조사·연구('20~) ·국제현안 대응팀 구성·운영('19.上) 	해수부, 환경부 해수부, 외교부 해수부

2. 해양 플라스틱 수거·운반 체계 개선

① 수거 사각지대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도서지역 쓰레기 실태 조사('19) ·도서지역 관리체계 구축('20~) ·침적 쓰레기 수거(연중) ·취약지역 수거사업 약정 체결('19~) 	해수부
② 수거체계 효율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해양 플라스틱 분포도 작성('20~, R&D) ·드론활용 발생 모니터링 실시(연중) ·수거장비 개발('20~, R&D) 	해수부
③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어촌계 인센티브 부여('20~) ·폐어구 집중수거('19 시범, '20~) ·바다환경지킴이('19~) 	해수부

추진 과제

추진 일정

소관 부처

3. 해양 플라스틱 처리·재활용 촉진

①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

- 전처리 시설 설치('20~)
- 폐스티로폼 압축기 보급(연중)
- 처리업체 선정·사후관리 지침 마련('19.下)
-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강화('20~)
- 공공기관 구매 촉진('19~)
- 업사이클링 공모전 개최('19~)
- 우수 재활용 제품 전시전 개최('20)
- 재활용 기술개발('20~, R&D)

해수부-환경부 협의

해수부

해수부

환경부

환경부

해수부, 환경부

해수부, 환경부

해수부, 환경부

②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

4.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

① 법적 기반 마련

-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('19)
- 표준조례안 마련 보급('20~)

해수부

해수부

②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반 구축

- 분포현황 조사('19 시범, '20~)
- 위해성 평가('21~, R&D)

해수부

식약처, 환경부 등

③ 국민 참여 확대

-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개시('19.5.)
- 해안·하천 쓰레기 일제 수거 행사('19.6.)
- 지역 프로젝트 빨굴('19~)

해수부

해수부, 환경부

해수부

④ 맞춤형 교육 강화

-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작·보급('20~)
- 현장방문 교육 확대('19~)

해수부

해수부